

## 노조 중앙위, 2020년 사업계획안 등 51차 정대 인권 승인

13일, 132차 중앙위 ... 고용안정·노동 3권 보장 등 18만 통일요구안, 임금 120,304원 인상안 상정

금속노조가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는 51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할 10기 2년 차 사업평가안을 비롯해 11기 1년 차 사업계획안과 2020년 투쟁방침안을 승인했다. 중앙위원회는 11기 1년 차 사업예산안도 승인했다.



노조는 2월 13일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132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중앙위원들은 산별 기금 배분 비율 변경과 쟁의적립금 사용, 민주노총 중앙위원과 대의원 선출 기준, 배정안 등을 승인했다.

노조는 10기 2년 차 사업 평가에서 ▲3월 6일 총파업 등을 전개하며 1년 내내 투쟁을 계속해 노동법 개악 저지 ▲자동차 부품사와 모듈 공장, 직서열 공장 조직화, 식당 여성 노동자, 재벌사 조직화 등을 통해 대재벌 투쟁의 교두보 마련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응해 금속노조 힘을 집중한 공동투쟁으로 연대 확산 등을 총괄 성과로 꼽았다.

노조는 11기 1년 차 양대 사업 기조로 ▲산업구조조정 대응과 노동법 개악 저지 ▲노조할 권리 보장과 전 조직적인 조직 확대 사업을 제출했다. 이를 위한 6대 사업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법·생명 안전법 개정 투쟁 전면

화 ▲산업정책 개입 강화, 구조조정 저지, 재벌 개혁, 비정규직 철폐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전 조직적인 조직 확대 사업 ▲지역 중심의 조직 강화와 재정 혁신 ▲연수원 개원에 맞춘 산별 교육시스템 구축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반전 평화운동을 제안했다.

노조는 2020년 산별교섭 투쟁 기조로 ▲저성장 국면과 4.0 기술발전 등 산업 재편에 대응, 금속노조 산업정책 수립과 전 조직적 투쟁 강화, 조합원 고용안정 집중 ▲노조파괴 대응, 노조 할 권리 확대, 임금동결·복지축소·이중임금제·탄력근로제 저지, 생활임금 쟁취와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집중 ▲재벌체제 개혁과 고용안정 산별 체제 전진을 위해 18만이 함께하는 투쟁 실천 등을 내걸었다.

노조는 2020년 임·단협 18만 통일요구로 ▲산업구조조정 대응 고용안

정 보장 ▲노조파괴 대응 노동 3권 보장 등 두 가지를 요구한다. 산업구조조정에 대응한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안정위원회와 고용안정 기금’을 요구한다. 노조파괴에 대응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노동쟁의 원칙, 쟁의 중 시설 이용, 노동쟁의와 신분보장, 신규채용과 대체 근무 금지, 불이행 책임’ 등을 요구안으로 정했다. 2020년 임금인상 요구안은 기본급 월 120,304원 인상이다.

중앙위원들은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산업구조조정 대응한 고용안정 보장 ▲노조파괴에 대응한 노동3권 보장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만 원 등을 결정했다. 중앙교섭 불참사 공동요구는 정년연장 등이다.

중앙위원회는 이밖에 ▲노조 각종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부서장 임명 건 ▲신분보장 기금 지급 건 ▲2019년 임단협 불승인, 미승인 사업장 처리 건 ▲2020년 미조직기금 사용 건 ▲산별 부대비용 사용 건 ▲조합비 납부 유예와 정액 납부 사업장 건 ▲조합비 분납 요청 건 ▲조합 자산 폐기와 구입 건 등을 승인했다. 중앙위원들은 기타 안전에서 노조 규약·규정의 오타를 수정·삭제하고 중앙위원회를 마쳤다.